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관련 기사 3면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3면

집값 재상승
시장경제 방식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한다

4면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

5면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한
자본주의의 변화

7면

홀로코스트 80년 —
그저 이례적인
역사적 사건 아니다

10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면
코레일네트웍스 투쟁 12면
현대차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11면

코로나19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정부의 직무유기와 수감시설의 억압이 낳은 참사

김승주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월 5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에서 6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국 수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1190명을 넘어섰다.

책임 부처인 법무부와 추미에 장관은 마지못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마스크 지급, 수용자 분산 등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감염은 퍼져 버렸다. 오히려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분산하겠다고며 다른 구치소로 보내자 거기서 또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벌써 사망자도 두 명 나왔다.

12월 27일 기저 질환이 있던 60대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동부구치소 안에서 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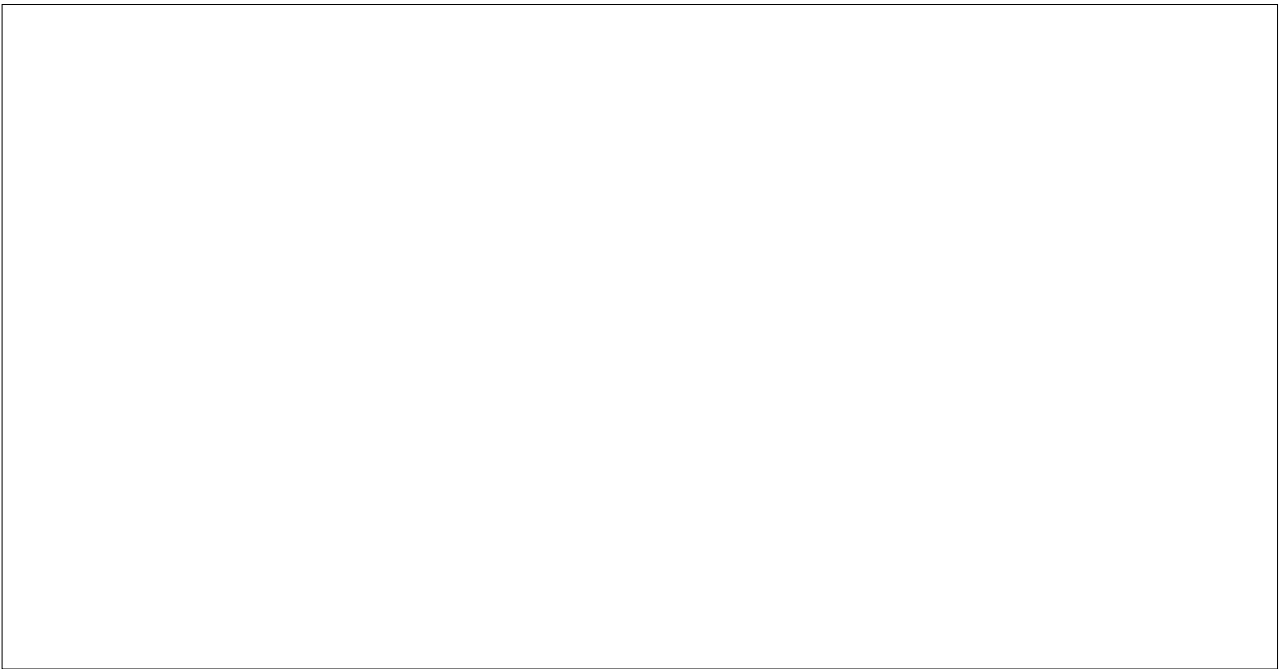
다른 한 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구치소 지정 병원에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급차에서 대기하던 중에 사망했다. 그는 30대였고 그의 부모는 자식의 확진 사실보다 사망 소식을 먼저 들어야 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구치소·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수용자 수가 1월 3일 기준 전국 987명에 이른다(동부구치소가 608명).

지독한 억압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알려진 대로,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먼 마스크만 뽀아 쓰도록 했다. 심지어 마스크 자비 구입이나 반입을 허가하지도 않았다. 외부 병원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철창 사이로 짙박한 손글씨가 적힌 종이를 내밀어 보이고 있다

에서 의사가 넣어 주려 한 마스크를 회수해 가기도 했다.

300명이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5~6인용 방에 8명씩 들어가 부대끼며 생활했고, 이 때문에 한 명이라도 걸리면 그 방은 물론 창문으로 연결된 복도를 통해 건물 전체로 감염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런데도 구치소 측은 수용자를 확진자와 접촉자로만 나눠서 관리했다. 이 말인즉슨 잠재적 확진자들이 섞여 있는 접촉자들을 한데 모아 놓았다는 것이다. 수용자들이 “확진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절규한 이유다.

게다가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이런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수용자들의 외부 서신 발송도 가로막았다. 수용자들이 철창 사이로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내부 상황을 폭로하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나서야 구치소 측은 서신을 소독해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은 감염 확산의 한 원인으로 꼽힌 과밀 수용 문제를 인

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구치소나 교도소]는 혐오 시설이라서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야말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수용자들은 전국민에게 보장된다는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정부 표현대로 구치소가 “교정시설”이라면 왜 이런 지독한 천대까지 당해야 하는가?

계급 천대와 감옥

정부의 살인적인 직무유기는 단순한 실수나 무능 때문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감옥이 수행하는 억압적 성격과 그 수용자들에 대한 계급적 천대 문제가 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명박이 받는 특별 대우를 보면 계급 차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명박은 구치소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에 은근슬쩍 짐을 뺐다.

이명박은 2차 전수조사 결과 1차에 비해 확진자 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하자,

공교롭게도 결과 발표 바로 다음 날 구치소를 나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명박 측은 동부구치소 사태를 핑계로 재수감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군불을 땀)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우파 야당은 동부구치소를 세월호에 비유하는 등 신이 나서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이 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어찌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나!).

재소자 인권에 별 관심 없었던 것은 정부나 우파 야당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 대부분이 ‘잡뽀’ 취급을 받는 하층민 배경의 사람들이다.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면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기득권층은 아무리 큰 사건나 횡령, 뇌물죄를 저질러도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일쑤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은 생계형 범죄로도 구속되기 일쑤이다. 지난해 10월 고시원에서 고작 구운 계란 18개를 훔친 찻값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은 최근 사례일 뿐이다.

국가는 이런 힘 없는 사람들은 권력자들과 달리 손쉽게 구속수사를 벌인다. 그런 과잉 구속 횡포 때문에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전국의 수감시설들이 정원을 130퍼센트까지 넘겨 팍팍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염 위험도 증폭한 것이고 말이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

지배계급의 관심사는 범죄자의 “교정”보다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또한 경제 침체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찰 강화 등 점차 권위주의적 방식을 늘려 왔다. 동부구치소가 외부 서신을 금지하고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게 한 것도 그러한 권위주의적 조치의 일부다.

역대 최대 확진자를 낳았던 지난해 3월 신천지 교회발 집단감염 사태 때는 정부의 쥐 잡기식 마녀사냥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이번에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천대와 억압적 태도가 사태를 재난 수준의 위험으로 증폭시켰다. 동부구치소 참사는 국가가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 범죄이다.

이것이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문재인)이 이끄는 정부,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추미에)이 벌인 일이다.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과 종교 집단을 탓하면서 가까스로 유지해 온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신화’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이제 그 자리를 정부에 맞선 투쟁으로 대체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쟁취해야 한다.

한국 선박 이란 억류

한국이 동참한 미국의 제재 탓에 긴장이 고조된 결과

김종환

1월 4일, 한국 선박(한국계미 호)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다가 이란에 억류됐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박이 해양 오염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포된 한국 선박과 선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아직 그에 대한 사실관계나 실질적인 억류 이유는 명확치 않다.

한국 정부는 4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면서도 청해부대를 출동시켰다.

이번 억류와 이를 둘러싼 파장은 그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동참해 온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원유를 수송하는 핵심 길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이란이 항의하고 양측이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왔다.

지난해 1월 3일 미국은 드론을 동원해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거셈 솔레이마니를 표적 살해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한국 선박이 억류되기 거의 정확히 1년 전이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지지 아래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무력시위를 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은 더더욱 고조됐다. 미국은 12월 30일 전략핵 폭격기 B-52를 걸프만에 출격시켰고, 그 며칠 전에는 핵잠수함 조지아 호가 호르무즈해협에 진입했다. 이런 진입 사실을 미국이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무력 시위 효과를 낸다.

무력 시위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도

심각한데, 미국의 제재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와중에도 의약품 반입을 금지할 정도로 비인간적이다.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경제적으로 이란을 공격·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는 오직 미국의 흔들리는 중동 패권을 다잡기 위한 것일 뿐이다. 또,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요구한 것도 자신의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 많은 제국주의 개입의 빌미로 삼기 위한 것이지, 선원들의 안전을 우려해서가 전혀 아니다.

1년 전에도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살해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제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 바 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호응

해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란 정부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을 예치한 한국 계좌를 동결했고, 이란 정부의 동결 해제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이렇듯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란 압박에 공조해 온 탓에, 한국 선박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긴장 속에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야 했다.

이번에 문제인 정부가 청해부대를 출동시킨 것도 긴장을 더 키울 수 있다. 청해부대는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구성한 연합 함대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아직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연락장교를 파견해 공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해부대 출동은 미

국 주도의 연합 함대에 공식 참여하는 계기가 되거나 더 심각한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 된다면 선원들의 안전만 더 위험해질 뿐이다.

이란 이유로 본지는 2019년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청해부대가 한국인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고 당시 민중공동행동이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행동을 가졌었다.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제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참이 계속되는 한, 한국 선박이 안심하고 호르무즈해협을 지나기는 어렵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일체의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대이란 제재 같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 정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새해에는 우파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도 싸우자

김문성

새해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약점들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K방역의 실체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여권의 자중지란을 불렀다. 일명 '정인이 학대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생지옥을 연상시키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은 지난해 추미에 법무부의 완벽한 직무유기가 낳은 참사다. 국가가 관리하는 집단 수용시설이 재소자에게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한 방에서 생활하는 일이 벌어졌고, 으레 그랬듯이 구치소 측은 외부로 나가는 서신을 차단했다. 심지어 개인의 마스크 구매까지 막았다. 이 정도면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가 의심될 정도의 사태이고, 명백한 정부 책임이다.

그동안 추미에는 자기 아들의 탈영 무마 의혹 제기(“소설 쓰고 있네” 하며 사건을 덮기에 바빴는데(결국 추미에 라인의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했다), 정작 소설이나 나을 법한 끔찍한 직무유기 범죄가 국가의 수용시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K방역의 성공”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얻은 가장 큰 반사이익이었다. 3월, 8월, 11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코로나 방역 쟁점이 지지율 하락의 방어선 구실을 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감염 3차 유행이 시작되고, 동부구치소의 재앙적 실패가 드러나면서 코로나 문제도 정부 불신의 요인으로 바뀌고 있다.

1월 6일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문제를 다루는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측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한항공 주주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물론 인수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 재계의 동의를 얻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 측이 공개적으로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의견을 밝힌 것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있음을 보여 준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거의 언제나 지배계급의 내분과 이로 인



문재인 정부는 “개혁” 거짓말로 진보 진영을 포섭하려 하지만, 위기에 몰리면 물릴수록 우파와 기업주들에게 더욱 아부하며 구원의 손길을 요청한다

한 국가기구들 내 갈등을 일으킨다.)

정인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도 정부에 악재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로 최근 재점화됐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 이웃 주민 등에게 세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되고 있다. 16개월된 유아가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데도 경찰이 그것을 막을 기회를 스스로 놓쳐 버린 것이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한 뒤에야 비로소 수사에 들어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야 부검이 이뤄졌다. 양천경찰서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룬 경찰청의 경찰개혁TF 팀장이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재차 부검을 의뢰해,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양부모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쳐 기소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논란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경찰 수사권 강화를 “검찰 개혁”이

라며 강행 추진한 정부에 대한 반감과 반격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지난해 가장 과잉 논의된 쟁점으로 검찰 개혁이 뽑혔고, <서울신문>에서는 공수처가 권력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권의 레임덕을 막으려고 기를 쓴 바로 그 문제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사면론도 문제가 됐다.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국민 통합을 위해 둘의 사면을 문재인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 때문이었다. 최근 문재인·민주당·이낙연이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기극을 벌이는 한편, 또 다른 돌파구로서 우파에게 추파를 던진 것이다. 당연히 지지층에서 반발이 일었고 친문재인 신문 <한겨레>조차 비판을 가했다. 이런 반발 때문에 문재인-이낙연 교감설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문재인과 이낙연의 관계, 박근혜 대법원 확정 판결이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둘 사이에 교감이 있었고 이낙연이 총대를 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낙연의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는 이 쟁점에서 친문 계열의 눈치를 보며 두루뭉술한 태도를 취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정치인 사면은 통치 행위[로써] ... 대통령이 결단할 영역[이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을 사면한다면 그것은 문재인이 촛불 대통령을 참칭하는 일을 말로라도 그만둔다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다(실천은 진작에 그랬다). 공교롭게도 청와대-검찰 갈등 때문이었던 이명박·박근혜를 구속시켰던 검사들은 지난해 수난을 겪었다.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해야 국민 통합이 된다는 말은 이들이 포용하고자 한 국민이 누구인지 보여 준다. 이낙연은 지난해 연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그 법은 입법과정의 끝으로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있다.

기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낙연이든 이낙연을 비판하는 민주당 친문 정치인들이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들의 공통된 계급적 본질을 보여 준다. 민주당은 우파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우파 야당·언론은 공수처법 개정 안에도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노동자 연대> 신문이 일찍부터 지적해 왔듯이, 최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본질적으로 개혁배신에 대한 실망과 환멸에 따른 대중의 이반 때문이다. 게다가 개혁 사기극이 들통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우파에게 아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개혁(또는 그 최소치인 적폐 청산)이 과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어쭙잖은 진영논리로 부패 혐의를 가리더니, 이제는 진영논리를 반성한다면서 적폐 세력과 화해하려는 것이다. 물론 진보진영 포섭하기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누구에게 진짜 손길을 내미는지를 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해 왔지만, 진정한 성격이 자본가 계급의 정부임을 반영한다. 대중은 더욱 이반할 것이고, 그럴수록 자본가들(지배계급)은 문재인 정부의 유용성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즉, 진보진영(특히 노동계)의 저항을 무마하는 것이 이 정부의 주된 사명이자 상대적 장점이라는 점도 약화될 수 있다. 노동자 운동이 만만찮은 저항에 나설 때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본성을(이해해 주려 하지 말고) 더욱 직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_____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집값 재상승

시장경제 방식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강동훈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5.5퍼센트대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이처럼 급등한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낳은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집값이 급등해 대다수 서민들에게 좌절감만 줬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의 집값·전셋값 상승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급등과 관련 있다. 코로나19로 이미 전 세계에서 190만 명 가까이 사망했고, 경제는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되지만, 증시와 금·비트코인 등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풀린 돈들은 어디로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심화되는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2020년 미국, 중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8개국이 시중에 공급한 돈만 14조 달러(약 1경 5000조 원)나 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매일 120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금융시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돈 풀기 정책은 전 세계 채권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 채권 규모도 18조 달러(약 1경 9656조 원)나 된다고 한다.



14년 만에 최대로 오른 집값 커지는 양극화 속에 정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들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달러(약 11경 원)를 넘었다. 그간 세계 증시 시총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 약간 못 미쳐 왔는데, 최근 전 세계 시총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지난해 세계 GDP(83조 달러)보다 20퍼센트 이상 많은 사상 최고 수준이 됐다.

한국에서도 넘쳐나는 돈들이 집값뿐 아니라 주식 시장도 밀어 올리고 있다.

지난해에 코스피는 30.8퍼센트(519조 원)나 올랐다. 주요 20개국(G20) 중 상승률이 1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400대까지 떨어졌던 증시는 계속 올라 최근에는 3000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도 지난해 초 242조 7681억 원에서 연말 385조 5820억 원으로 142조 8139억 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자산 가격 급등은 현재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여 준다.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놓은 돈이 투자에 이용되

지는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을 끌어올려 노동계급을 비롯한 서민층의 주거 여건마저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노동자·서민이 ‘벼락거지’ 신세를 면하려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에 뛰어들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해 위기를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와 기업부채는 역대 최고치인 3014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의 1.57배를 기록했다.

특히, 가계 부채는 1682조 1000억 원으로 2019년 3분기보다 7퍼센트나 증가해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처음으로 100퍼센트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신년사에서 “실물-금융 간 괴리”,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을 지적하며,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을 사람들 또한 뒤늦게 주택 매입에 나선 서민층일 것이다.

변창흠의 친시장적 공급 방안, 투기에 기름 붓는 격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자 문재인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하려면 집값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1월 5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풀어야 할 중차대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파와 보수 언론들은 세금 인상,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비판하며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도 또다시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낸 것이다.

진보학자로 유명했던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입장을 바꿨다. 후보자 청문회 때 “공공성을 가진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던 그는 장관이 된 뒤에는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간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월 설 즈음에 발표될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재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될 듯하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문재인 정부는 계속 공급 확대 정책을 펴 왔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2018년 9월 서울 근교에 3기 신도시를 세워 주택 30만 채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태릉골프장 등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식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마찬가지로 연말 들어 집값과 전셋값은 다시 치솟았다.

시중의 유동 자금이 넘쳐나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친시장적 공급 확대는 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공산이 큰 것이다. 게다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 상승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며 임대사업자들에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막대한 혜택을 줬다가, 지난해에 집값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공시지가 상향,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은 3년간 특례를 적용해 부담을 완화해 줬고, 중부세 최고세율을 6퍼센트로 올렸으나 애초부터 대상

자가 극소수인 점 때문에 ‘찜뭇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을 매각해 이득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소유자가 팔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주택 투기

사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0퍼센트가 넘는다. 그러나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 비율인 ‘자가 보유율’은 6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2019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228만 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보다 16만 명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5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늘었다.

이런 사실들도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유층의 주택 투기가 문제라는 점을 보여 준다.

집값을 잡고 노동자·서민의 주택

난을 해결하려면 종부세 등 부유세를 대폭 올리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값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낮아, 서울은 불과 8퍼센트밖에 안 된다. 게다가 얼마 안 되는 임대주택 대부분도 국민층이 걸거리로 나앉는 것을 막는 수준이라 어지간한 노동계급 가정이 만족할 만한 것도 못 됐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은 시장의 이윤 논리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우선할 때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를 주택을 시장 논리에 맡겨 놓는다면, 어떤 때는 ‘벼락거지’를 어떤 때는 ‘하우스푸어’를 만들며 노동자·서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정진희

이 글은 〈노동자 연대〉 349호에 실린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기사를 약간 손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출산을 저하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출산율 하락이 보편적으로 나타났고, 각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하고자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 지배계급은 한국의 출산율이 OECD에서 가장 낮다는 것에 걱정이 크다. 지난해 8월에도 문재인 정부의 ‘인구정책 TF’ 보고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며,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출산율 하락을 걱정하지만 아이를 낳고 싶는데도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데는 큰 열의가 없다.

물론 한국 지배계급은 ‘저출산’으로 장차 노동인구와 병역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을 우려한다. 자본주의에서 부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계급이고 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데에서 지배계급의 이윤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본 축적을 위해 국가는 당장의 노동력 공급뿐 아니라 미래의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중시한다. 노동계급의 필요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출산·양육에 국가 재정 투입을 계속 늘려 온 까닭이다.

또, 세계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까지 벌어지므로 국가는 병역 인력 확보도 중시한다. 불황으로 국가 간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는 미래의 병역 인력 ‘부족’에도 대비하고자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주류 언론 등의 인구 감소 담론은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사태를 과장하고 원인을 왜곡한다.

‘경제 붕괴’, ‘한국인 소멸’ 등 종말론적인 과장으로 가득차 있는 인구 감소 담론은 경제 위기와 실업, 빈곤 등 자본주의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인구 수 탓으로 몰아가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낸다. ‘저출산·고령화’ 담론은 여성 차별, 노동·연금 개혁, 사회보험료 인상, 교육 재정 축소, 공공서비스

의 시장화 등 온갖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저출산’ 담론

정부와 전경련, 주류 언론 등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어서 한국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산율 감소는 노년층이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보다 많아지는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매우 흔하지만 그 근거는 없다. 출산율과 경제 성장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종종 제기된다.

일본의 대표적 거시경제학자로 꼽히는 요시카와 히로시 릿쇼대 교수는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세종서적)에서 그는 150년 간의 일본 인구 추이와 실질 GDP 통계를 제시하며 “경제 성장과 인구는 거의 관계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게 출산율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1960년대 산업화 이후 30년 넘게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는데, 출산율이 하락하면서도 고도성장이 계속되던 시기가 있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보편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일어난다. 출산율 저하에는 사회의 구조 변화와 국가의 정책들, 대중의 의식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 증가와 교육 기회 증대가 큰 영향을 끼친다. 피임과 낙태술의 발전, 보건의 향상, 아동의 교육기간 확대 등도 영향을 끼친다.

출산율 저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여러 요인들이 결합돼 일어난 결과이지 불황의 원인이 아니다. 경제 위기와 침체는 ‘저출산’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비롯한다.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목적은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이다. 경쟁적 자본 축적 때문에 자본주의는 엄청난 성장을 하며 호황을 보이기도 하지만, 같은 이유로 경제 위기가 필연적이게 된다. 국가의 개입으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자본주의가 오래될수록, 호황은 점점 더 짧아지고 불황은 점점 더 길어지고 만성적이 된다.

오늘날 주류 언론과 정부, 학계 등은 대체로 출산율 저하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한다.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출산율 저하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한편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출산 능력을 통제



장시간 노동과 높은 양육 부담, 빈곤 등의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기 쉬워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비록 이것이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여성이 자신의 출산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여성과 성 해방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동시에 장시간 노동과 높은 양육 부담, 빈곤 등으로 인해 여성이 아이를 원해도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어두운 측면도 있다. 지배자들은 이를 여성이나 청년들의 개인주의 탓을 하지만, 높은 양육 부담과 빈곤 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 개인들의 책임이 아니다.

‘인구 고령화’ 담론

‘인구 고령화’ 담론도 경제 위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한다.

인구 고령화로 사회가 위기에 빠진다는 주장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서구 자본주의에서 오늘날 상식처럼 퍼져 있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생각은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나왔다. 경제 불황 속에서 부상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이 개념은 인구 고령화로 보건과 사회적 돌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노인을 모욕하는 사회·경제 정책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주장은 증거에 기반한 게 거의 없고 방법상 여러 문제가 있다. 주요 문제 하나는 부양비 개념을 사용해 사회의 연령구조가 변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측정한 것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모두 사회의 재정 지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 노인의 경험 이 같지 않은데도 하나로 취급한다. 이렇게 자의적인 방식으로 낸 통계 수치는 청년층보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부담이 증가하고 청년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이런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다. 201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자식과 친척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사람은 17.7퍼센트에 그쳤다. 대다수(69.9퍼센트)가 생활비를 본인과 배우자가 마련한다. 정부·사회단체 지원에 의존한다는 비율은 12.4퍼센트에 불과하다(그나마 2009년 8.6퍼센트보다 늘어난 것).

대학 등록금 부담, 주택난,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해 노인들이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추계에서 청년층이 노부모에게서 받는 재정 지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노인이 사회에 부담이 되기는커녕, 노인들은 계속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이 자녀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손자·손녀를 돌보고 있다. 노인들도 대개 여러 방식으로 생계 활동을 하고 있고, 복지 부족 때문에 원하던 원치 않던 임금노동을 해야 하는 노인들도 많다.

모순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인구 수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인구 정책은 착취적인 계급 관계를 철저히 보호하며 자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모순이 생겨난다.

지배자들은 ‘저출산’으로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진다고 말하지만, 당장 일자리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해결에 나서지 않고 거의 방치한다. 미래의 청년 인구 부족 사태를 연일 경고하지만, 현재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

세계 자본주의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계 인구가 줄고 있지는 않다.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청년 인구 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진국의 지배자들은 이민을 확대하면 국내 노동력 부족을 어렵지

않게 해소할 수 있음을 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 해 왔지만, 여러 요인에 출산율 재고가 쉽지 않다고 여겨 이민 확대를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이민 정책은 임금을 낮추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자 내국인-이주민,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차별을 제도화하면서 이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 담론에 내재된 주장, 즉 노인이 쓸모없고 사회에 부담만 준다는 생각은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거나 착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배계급의 태도를 보여 준다. 그러나 불황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낮추고 복지비 인상 압력을 줄이고자 노인의 노동시장 참가를 더 늘리는 정책도 펴고 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인 노동력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저출산·고령화’ 담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정, 실업과 빈곤 등에 대한 책임을 인구 문제로 돌리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감추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한다.

국가와 지배계급이 파국적인 인구론에 기초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새롭지 않다. 인구가 많아서 빈곤이 생긴다는 19세기의 맬서스 사상부터 그 뒤 세계적으로 확산된 우생학 이론 등에서 보듯, 각국의 지배계급은 언제나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차별 문제를 인구의 특정 집단(빈민, 여성, 장애인, 흑인 등)에게 돌리며 대중을 이간질해 왔다.

그러나 거대한 경제적·생태적 위기를 초래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인구가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 체제이다. 위기 속에서도 소수는 더욱 부유해지고 위기의 책임이 없는 대다수 노동계급과 서민층이 피해를 보는 자본주의가 진정한 재앙이다.

※전문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전쟁 위기...

“항구적 재난”이 된 자본주의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끝이 보인다. 코로나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백신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 이 끔찍한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대단히 효과적인 백신이 여럿 나왔다. 이는 사실은 우리(일반적으로는 인류 전체, 구체적으로는 분자생물학자들)가 이룬 위대한 업적 중 하나다.”

위 내용은 [유럽 최대 바이오 연구소인] 프랜시스크릭연구소의 루퍼트 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

이 12월 초에 쓴 것이다. 하지만 촉배를 듣기 전에, 1년 전만 하더라도 전염병 대유행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1930년대 이래 최악의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다는 점을 명심하자.

빌의 글은 경고로 끝난다. “우리의 기술도 빛을 발했지만 운도 따랐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백신은 비교적 제조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음번에 대유행할 바이러스는 이만큼 너그럽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변이가 생겨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는 최근 상황은 우리가 자연

을 (통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엄중히 확인시켜 준다.

이제 우리는 전보다 더 잘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읽었듯이, 마이크 데이비스나 롭 윌러스 같은 선구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하에서의 환경 파괴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 코로나19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5000만~1억 명이 숨졌던 1918~1919년의 끔찍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스페인 독감]에 맞먹는 전염병 대유행들이 하나 이상 닥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세계사학자 윌리엄 H 맥닐은 고전 《역병과 사람들》(1976)[국역: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한울)]에 이렇게 썼다.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생적 유기체가 평소의 생태적 지위를 벗어나 인구 밀집 지역(오늘날 세계적으로 두드러진다)을 아마 파괴적 치명물로 새롭게 위협하는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맥닐도 이해했듯, 인간과 기생 미생물(바이러스·세균)의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 신자유주의 시기에 자본주의는 세계적 규모로 농업을 산업화했고 남아 있는 야생 지역을 침범했다.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재난은 더는 예외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일이 됐다. 주류 정책 입안자들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국 민주당에 지적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브루킹스연구소는 차기 바이든 정부에 코로나19 위원회를 꾸려서 케네디 암살, 9·11 공격 때와 맞먹는 수준의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검은 백조”

코로나19 위원회를 제안한 일레인 케이마크는 이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의 책임을 조사할 뿐 아니라 “확률은 낮지만 강도는 높은 사건들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다뤄야 한다고 썼다. 그런 사건들은 소위 “검은 백조”라고도 불리는데, 드물게 벌어지고,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적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단 벌어지면 아주 충격이 크고 파괴적인 사건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21세기에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 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더 위험해질 것이다.”

이런 일은 각국 지배계급에게 지적·정책적 도전 과제를 안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론 우리에게 재난을 다룰 도구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1차 세계대전에 반대해서 쓴 《유니우스 팸플릿》(1916)은 그런 도구를 제시한 고전이다. “오늘날 우리는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한 세대도 더 전에 예언했듯이 지독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다. 한편에는 제국주의가 승리하고 모든 문화가

파괴돼 고대 로마가 겪은 인구 감소, 황폐화, 퇴보, 거대한 공동묘지화가 있다. 반대편에는 사회주의의 승리 즉, 제국주의와 그 수단을 그리고 전쟁에 맞서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적인 투쟁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또 에릭 홉스봄은 1914~1945년을 “재난의 시대”라 불렀다. 그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불황, 파시즘·국가사회주의의 성공적 부상, 스탈린주의의 승리, 홀로코스트가 있었다. 이런 연쇄적 재앙을 거의 동물적 감각으로 감지한 룩셈부르크는 그 자신이 그런 재앙의 초기 희생자가 됐는데, 파시스트 무장조직의 전신 격인 세력[자유군단]의 손에 1919년 1월에 맞아 죽은 것이다.

하지만 1945년 이후 미국의 관장 아래 선진 자본주의는 서유럽과 일본에서 재건됐고, 세계 경제는 역사상 최대 호황을 구가했다. 부유한 선진국에서 노동계급이 투쟁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사반세기 동안 완전 고용이 실현됐고 복지국가가 확대됐다. 서구에서는 재난이 잦아들었다. 1950년대 초 한반도, 1960년대 중엽 인도네시아, 1970년대 말까지 인도차이나 반도의 현실은 여전히 끔찍했지만 말이다.

1970년대에는 오랫동안 계속될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를 “장기 불황”이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는 그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조직 노동계급에 일련의 혹독한 패배를 안기고, 생산 구조를 재편하고(그에 따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가 촉진됐다), 삶의 모든 측면을 가차없이 상품화했다. 그럼에도 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확장 국면으로 재진입할 만큼 이윤율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은 갈수록 금융 거품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데에 주로 기대게 됐다. 국가는 이런 거품 조장에 늘 일조해 왔다. 하지만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성장은 중앙은행이 금융권에 돈을 새로 주입하는 데 의존하게 됐다. 그 돈 덕에 자산 시장은 호황을 구가했고, 부동산·주식·채권 가격이 치솟았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됐다. 신흥 경제 강국인 중국에서도 수출 산업들이 부채에 기반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비슷

한 동역학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1938년에 트로츠키는 이렇게 썼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경제적 전제 조건은 자본주의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일반적으로 이미 도달했다. 인류의 생산력은 정체하고 있다. 새로운 발명과 개선으로 물질적 부를 키우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는 당시에 진실이 아니었고, 지금도 확실히 그렇다. 충분히 높은 이윤율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정체해서 생산성 향상이 느려지는 것은 맞지만, 생산력은 꾸준히 커졌고, 지금도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같은 발명품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된 것도 기술 발전의 역동성을 보여 준다.

장기 정체

하지만 자본주의가 장기적인 경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각종 조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지만, 성배마냥 떠날들여지지 않은 지 오래됐다. 그보다는 일종의 자동 조종 장치처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같은 관료들이나 중앙은행이 관장하고 금융시장의 강제력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 결과, 세계 금융 위기와 끝도 없는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불만을 극우가 이용해 주류 부르주아 정치로 치고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들 세력은 일관된 대안 경제 강령을 갖고 있지 않다. 1930년대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아돌프 히틀러(가 저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제시한 바)와는 다르게 말이다.

체제가 무너지는 중이라고 하면 과장일 것이다. 그보다는 체제가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파괴적인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1945년 이래로 수십 년 동안 재난은 마치 갈수록 길게 드리우는 그림 자처럼 다가왔다. 냉전기(1946~1991) 내내 배제할 수 없었던 핵전쟁이라는 파괴적 재난 정도를 제외하면, 핵심 위험 요소는 (인간이 그 일부로서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을 맹목적으로 파괴하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임이 오래전부터 분명해졌다.

이런 파괴 행위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수년간 기후변화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사이클론 이디아가 동아프리카를 강타한 후의 모습

[이미지출처: 로이터/게티이미지뱅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한 자본주의의 변화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장애인 시설의 코호트 격리 해제, 탈시설 복지 정책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기후 변화다.(코로나19 등도 있으며
로 유일한 위험은 아니지만.) 캐나다
의 생태 사회주의자 이안 앵거스가
탁월한 저서 《인류세를 마주하며》에
서 주장하듯, 지구온난화는 단지 오
랫동안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자본주의가 18세기 말 산업
혁명과 함께 화석연료에 갈수록 의
존해 온 탓만은 아니다. 유명한 하키
스틱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기온 상승과 그로 인한 효과는 20세
기 중엽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1939~1945년의 공업화된 전
쟁[제2차세계대전](글자 그대로 석
유와 석탄으로 굴러갔다), 그 뒤 전후
장기 호황 동안 안드레아스 말름이
‘화석 자본’이라고 부른 것의 확장, 동
아시아의 [공업]생산 성장 탓이었다.
과학자와 활동가들은 이런 과정의
필연적 결과인 무질서한 기후 변화를
오래전부터 예견해 왔는데, 갈수록
늘고 있는 생태적 마르크스주의자들
도 그 일부였다. 이제 그 예상이 현실
이 됐다. 2019년 3월 동아프리카에
서 광범한 홍수와 인명 피해를 낳은
사이클론 이다이를 예로 들어 보자.
나는 어릴 적 짐바브웨(당시엔 ‘남로
지디아’)에서 자랐고 이웃 나라 모잠
비크의 항구도시 베이라에서 휴가를
보내곤 했다. 사이클론 이다이가 덮
치자 베이라는 수심 6미터 아래에 잠
겼고, 도시의 90퍼센트가 파괴됐고,
1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 UN에 따르
면, 2020년에 동아프리카에서 홍수
피해를 입은 사람은 600만 명에 이르
는데, 4년 전보다 5배나 늘었다.

예외가 보통인 세계

예외적인 일들이 갈수록 보통이

☞ 용어설명

하키 스틱 그래프

수백 년간 평균 기온이 일정했지만
20세기부터 뚜렷하게 상승 추이를 나
타낸 그래프. 뉘어 놓은 아이스하키
스틱과 모양이 닮았다고 해서 이 별칭
이 생겼다.

되고 있다. 2019년 아마존 화재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뒤
로도 오스트레일리아에 산불과 홍수
가 닥쳤고 미국 서해안에 산불이 크
게 일어 [그 매연 탓에] 샌프란시스
코가 대낮에도 어두울 정도였다. 물
론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부국은 이런 재앙에 비교적 수월하
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에서 보듯 수십 년에 걸친 민영화
와 긴축 탓에 국가의 [재난 대응] 역
량이 줄었고 정부가 위기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
졌다.(트럼프나 영국 총리 보리스 존
슨처럼 애초부터 대응 의지가 결여
된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코로나19는 역병과 기아가 계급
사회만큼이나 오랫동안 지닌 특징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바로 가난한 이
들이 재난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
이다. 가난하면 대응 자원도 부족하
고 위험이 닥쳤을 때 벗어날 수단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
나19 사망률은 인종과 계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림 반대편의 모습
은 예컨대 호화 요트 수요가 늘고 있
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자들은 감
염 중심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그
런 요트에서 계속 사업을 벌이며 더
많은 부를 쌓고 있다.

이런 격차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
들에게 목숨을 걸고 일상 생활에 나
서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압력을
보면, 아르헨티나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나탈리아 로메가 말한 “야만
의 정상화”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까지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대
한 급진적 비평가 발터 베나민이 제
2차세계대전 발발 직후에 지적했듯,
“우리가 비상사태에 산다는 것은 예
외가 아니라 법칙이다.”

재난을 가장 체계적으로 다룬 마
르크스주의 사상은 테오도어 아도
르노다. 독일계 유대인 아도르노는
나치의 권력 장악 뒤 유럽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의 친구이자 스승인
베나민은 [나치가 세운] 프랑스 비시
정부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좌

절되자 194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으로 망명했던 아도르
노는 1950년에 독일로 돌아갔지만
이 일을 절대 잊지 않았다. 아도르노
의 저작 《부정변증법》에는 이런 구
절이 나온다. “세계 정신은 … 항구
적 재난이라고 봐야 한다.” 아도르노
는 이 때 “세계 정신”이 자본주의를
반어적으로 지칭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도르노가 염두에 둔 재난은
나치와 홀로코스트였다. 그럼에도
그의 판단은 정확한 듯하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자본주의는 진작 떠
났어야 할 손님이요 이제는 “항구적
재난”이 됐다. 비록 국가 폭력보다는
들불, 홍수, 전염병 같은 형태가 두
드러지지만 말이다.

언제나 그렇듯 관건은 ‘무엇을 할
것인가?’다. 아도르노는 그가 “망가
진 인생”이라 부른 것 때문에 낙관을
갖기 어려웠고 다음처럼 썼다. “오늘
날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대
가를 치르더라도 재난을 피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가 어려워졌다.” 하
지만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과 “재난
을 피하는 것”은 그리 쉽게 대비될 수
없다. 당연히 우리는 사태가 더 나빠
지지 않도록 조직하고 맞서야 할 것
이다. 팬데믹 동안 필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고, 사용자들이
임금 · 노동 조건 · 생활 수준 · 자유
를 침해하려 드는 것에 맞서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재난이라면, 우
리 자신과 후손들의 안전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를 없애는 것
이다. [미국 민주사회당(DSA) 소속
국회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선도하는 ‘그린 뉴딜’ 아
이디어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체계적
인 대안을 향한 일보 전진이다.

하지만 제러미 코빈의 물락은, 자
본이 얼마나 거세게 저항할지를 보
여 준다. 강력한 좌파를 재건하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그 핵심에
자리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21년 1월호

번역 김중환

많은 사람들, 특히 운 좋게 코로
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2020년은 삶이 멈춘 듯한 한 해였다.
전염성이 더 강한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이 퍼지고, 영국 정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냉혹하고 무능하게 대응하
니, 이런 나날들이 끝나기까지는 더
한층 멀어졌다.

하지만 자본주의도 멈췄다고 생각
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움직이고, 언제나 변화한다. 이는 〈파
이낸셜 타임스〉 연말 특집호에 실린
매우 주목할 만한 기사 몇 편에도 드
러난다.

한 기사는 이렇게 썼다. “학계 · 자
문위원 · 기업 고문들에 따르면, 은행
과 중앙은행의 정책과 소비 양상 변
화가 맞물리면서 부와 성장이 소수
대기업 수중에 집중되던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IT · 소매 · 제약 등 핵심 부문의 대
기업들은 전염병 대유행에서 남들보
다 더 유리했다. 소비자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여력을 갖춘 소수의
친숙한 대기업들에게서 상품을 집중
적으로 구입했다. 그런 적응 능력 중
가장 분명한 것은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힘이 커지는 것은
코로나 전부터 계속된 장기적인 추세
다. 2019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
뷰〉에서 발표한 한 연구는 이렇게 지
적했다. “대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는 점점 더 쉬워진 반면, 소
기업들이 규모와 수익성을 키우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대기업-소기업 격차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투자자
산수익률 중위값 격차는 1990년대
15퍼센트에서 2010년대 30~35퍼
센트로 커졌다. 대기업은 연구개발
에 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요인 중 하나인 듯하
다. “2017년에 대기업은 연구개발
(R&D)에 평균 3억 3000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 소기업은 고작 600만
달러를 지출했을 뿐이다. 소기업이
대박 같은 발견을 이루지 않는 한 대
기업을 따라가기에 명백히 미흡한 것
이다.”

투자는 금융 시장 접근성에 따
라 달라진다. 이 점에서도 대기업이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유리했음
을 〈파이낸셜 타임스〉의 또 다른 기사
는 지적했다.

지난 몇 해 동안 기업들은 차입금
을 크게 늘렸는데, 저금리와 각국 중
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신규 유동성
을 금융 시장에 쏟아붓는 것)에 대응
해서였다.

한편, 오늘날 기업들은 은행 대출
보다는 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차
입한다.

2020년 3월에 전염병이 기하급수

적으로 번지면서 채권 시장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채권 등의] 자산
가치가 폭락했다. 이에 미국의 중앙
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
준)가 개입해 각종 회사채 등 금융 자
산을 매입하기로 약속했다. “채권을
단 1달러도 구입하지 않았지만 연준
의 약속만으로 채권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
뢰가 회복됐고, 기업들은 회사채를
물 만난 듯 발행할 수 있었다.”

1달러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차입 열풍”
속에서, 2020년에 미국 기업들은 채
권 시장에서 1조 8000억 달러를 끌
어모았다. 대기업들이 자금을 더 쉽
게 모을 수 있었다. 컬럼비아경영대
학원의 올리비에 다무니를 인용한 기
사는 다음처럼 전했다. “더 영세한 기
업들이 더 많이 의존하고 또 더 비싸
기도 한 은행 대출은 올해 문턱이 더
높아졌는데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
화했기 때문이다.

“다무니는, 2020년 상반기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분이 ‘거의 모두 대기업
이 이미 설정해 뒀던 한도대출* 계좌
에서 인출한 데서 나왔다’고 결론지었
다.”

한편, “부채 증가분에 대한 기업의
상환 능력은 줄었고, 로히트홀드그룹
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위 ‘좀비 기업
(최근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대출
이자보다 작은 기업)’의 수가 늘어 역
대 최고치에 가까워졌다.”

이 때문에 연준과 다른 나라 중앙
은행들은 채권 시장을 계속 떠받쳐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고 그래서
2007~2009년 세계 금융 공황 이래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래 왔다.

자산관리 기업 ‘인사이트 인베스트
먼트’의 알렉스 베루드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연준 때문
에 기업들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도]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게 됐
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끝없는 팽창하
리라는 생각의 기초는 그다지 견고하
지 못한 것이다. 좌파의 과제는 러시
아 혁명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100년도 더 전에 말한 대로다. “현실
그 자체만큼 급진적이어야 한다.” 끝
임없이 변모하는 이 체제만큼 급진적
이어야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위크》 2736호 번역 김중환

☞ 용어설명

한도대출

계좌에 한도를 열어놓고 인출한 만큼
대출로 잡히는 형태의 대출. 대기업 대
출은 대부분 한도대출 방식으로 이뤄
진다.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김문성

4년 전,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를 위해 매주 적어도 수십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 집회가 반 년 가까이 열렸다. 이 결과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에게는 적폐 청산 등 현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징표로 보였을 것이다.

이후 군부와 박근혜 정부의 촛불 무력 진압 논의나 사법 농단을 통한 불의한 재판 거래의 추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선출되지 않은 국가 관리자들의 반동적 성격이 새삼 부각된 것이다. 친민주당 지식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검찰 개혁” 어젠다로 연결시켰다.

한편,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 노동계 대표 조직들의 지도부들은 문재인 정부를 진정성 있는 개혁 정부로 보고 정부와 협력해 진보적 개혁을 얻겠다는 비판적 지지 노선을 취했다. 지지에 압도적인 강조가 있고 비판은 조금만 하는 것이었다. 가령 청와대-검찰 갈등 초기에는 정부 편을 드는 태도를 취했다. 기존 국가를 지킴대로 개혁을 얻으려는 개혁주의 전략은 이런 실천을 더욱 부추겼을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국가 관리자들이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 성격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한다. 첫째, 선출된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고 부패의 한 사슬이 되는 일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선출된 정부의 배신을 대중이 통제하지 못하고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들이 임명해서 채우는 선출되지 않는 관료들의 문제는 보나마나일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과연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고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능력은 제쳐놓고라도) 개혁 정부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는 우파나 관료들의 보이콧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자신의 선택

(개혁 약속 배신)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해 2017년도 조사는 70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의 조사에서는 58퍼센트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지지도에서 안철수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윤석열이 차기 대선 후보로 30퍼센트나 되는 지지를 받는다. 둘의 유일한 공통점은 주류 양당 소속이 아니면서 문재인과 갈등하는 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출된 정부이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주변의 지식인들이 의도적으로 빼놓는 것들이 바로 문재인 자신의 선택이라는 요점이다.

브라질의 교훈

최근 정경심 1심 유죄 판결과 윤석열 징계를 중단시킨 판결이 난 후, <한겨레> 칼럼 등에서 친여권 평론가들은 브라질 노동자당의 사례를 이용해 재차 정권 수호를 주장한다. 2016년 브라질 노동자당 정부가 부패 혐의로 탄핵됐는데, 이것은 선출된 정부가 우파의 반민주적인 사법 쿠데타로 전복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검찰 갈등 등에서 문재인 정부 편을 들지 않으면 대중의 정부 선출권이 선출되지 않은 우파 권력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며 진보 염원 대중을 협박하는 것이다.

브라질 우파가 합심해 노동자당 정부를 끌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 뒤 보우소나루 같은 강성 우익이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브라질 노동자당은 14년이나 연속 집권(대선에서 4번 연달아 승리)했는데, 왜 하필 그 시점에서 우파의 탄핵이 성공했을까?

서로 연관된 세 가지를 빼놓고 이를 설명할 수 없다. 첫째, 국영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와 연계된 노동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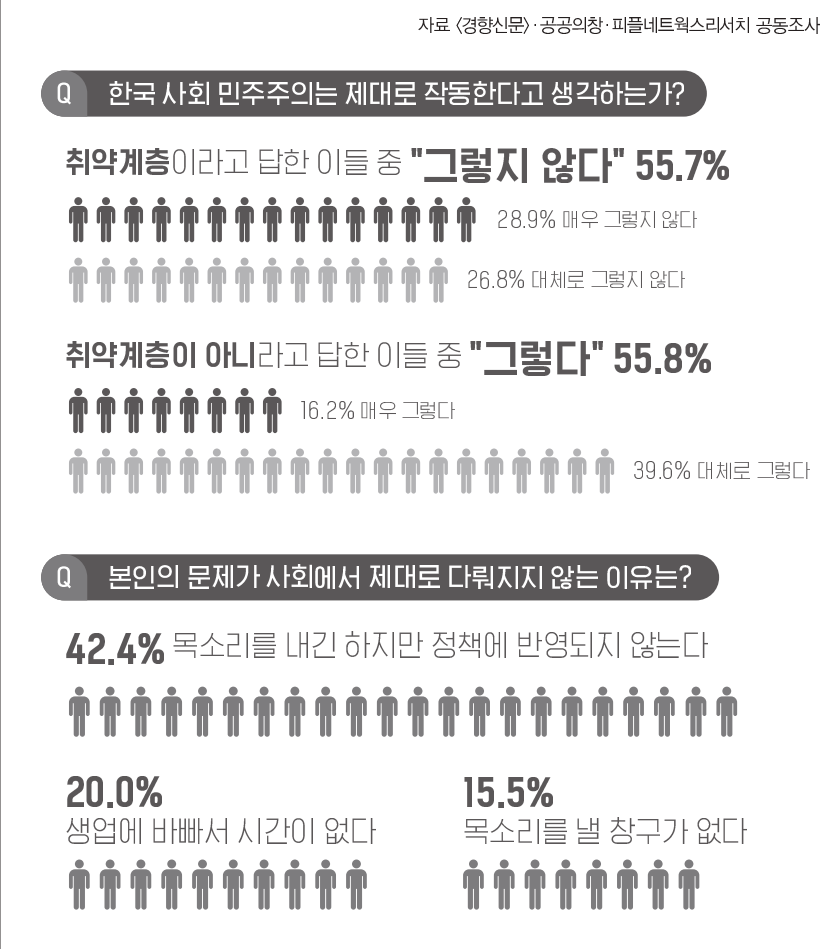
정부 관리들의 부패가 드러난 것이다. 둘째, 노동자당 정부는 2008년 세계적 경제 위기의 대가를 자신의 지지층인 브라질 노동계급에 전가해 오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정책들, 특히 긴축 정책을 펼 것이다. 심지어 노동자당 자신이 원자재 호황 덕분에 시행한 소심한 개혁 조치들(포미 제로, 보우사 파밀리아 등)을 약화시켰다. 셋째, 그러나 브라질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우파에게 이로울까 봐 노동자당 정부의 부패를 비판하고 항의할 책임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대중의 환멸은 더 커졌고 대중은 톨라 정부에 등을 돌렸다. 그래서 우파가 기세등등해져서 수십만 명이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며 노동자당을 정부에서 축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 노동자당 사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진보 개혁 정부일지라도 노동자 운동이 그 정부의 부패 의혹을 감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물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운동으로부터 출현한 진보 개혁 정부조차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기원과 과제

자본주의 국가는 하늘에서 떨어진 정치 조직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그 이해관계를 수호하려고 고안된 특별한 종류의 무장 조직이다. 이를 위해 자본가 계급이 이전 사회의 지배계급과 별인 투쟁과 협력 속에서 사회 전체에 확립한 정치적 구조물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변영에 의존하고, 그 변영을 위한 제반 과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된다. 그래서 이 국가를 운영하는 고위 관료들은 대체로 자본가 계급에서 총원되거나 그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채워진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특정 자본 분파(들)에게 유리하다가 불리하게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착취 질서를 보호하고 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돈 없고 뺨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계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추구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 국가의 탄생 경로와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전의 국가들과 민족과 거주민이 비슷해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한국 국가는 이전의 조선이나 일제 식민통치 구조와도 완전히 단절돼 형성됐다. 한국 자본주의 국가는 1945년 이후 미국 제국주의의 강력한 후원 속에서 치열한 내부 투쟁, 그리고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적 관계(가령 지주제도)를 일소하고, 노동계급의 운동과 조직을 깨뜨시켰다.

일제가 남기고 간 생산시설, 미국의 원조 물품과 자금, 또는 민간은행 등을 신흥 자본가들에게 넘겨 주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바탕 위에서 현대적 교육을 받은 젊은 엘

리트들이 국가 관료와 군부를 채우고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편입됐다. 자본가들과 신흥 국가 관료들의 동맹은 낙후된 농업 국가를 수출형 국가자본주의 방식으로 변모시켰다.

이후 오랜 우여곡절 속에서 시장 자본주의로 점차 전환하면서 한국 경제는 세계시장에 더욱 깊숙이 통합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운동의 등장과 성장으로 국가 형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로 변모해 왔다. 한국의 국가도 자본주의 수호를 위해 탄생했고, 자본주의 성장 단계마다 자본의 필요와 대중 지배에 적합한 국가 형태를 채택해 온 것이다.

따라서 누가 선출돼도(심지어 좌파가 선거로 집권해도)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국가를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공상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이념이 아니라 민주정(체)을 뜻한다. 단어 그대로 하면 '대중의 지배'로, 민주주의는 다수가 사회를 통치하는 국가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레닌은 계급이 사라지면(다수와 소수의 구분선도 사라지므로) 민주주의도 점차 소멸된다고 했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하면, 주민의 다수인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종속돼 착취를 받는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왜 사회의 소수인 자본가 계급이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거나 적대적인지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3대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부르는 혁명들 — 17세기 중반 영국 혁명, 18세기 후반과 19세

기 중반의 미국 혁명(독립전쟁과 남북전쟁),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에서 민중이 선호한 대안과 최종적으로 승리한 부르주아의 대표자들이 선호한 해법은 서로 달랐다.

부르주아지가 혁명에 소상공업자와 농민 등 민중을 동원할 필요성 때문에 자유, 평등, 우애가 보편적 가치로 선언되고, 후자의 대중도 신분제의 속박에서 해방됐지만, 진정한 평등과 자유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상적인 가치들은 형식 절차를 넘어서면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의 권리로 표현됐다. 법적·형식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국가는 선거권자를 주권자라고 부르지만, 소수의 경제 권력자들만이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다수 대중에게는 실질적 권력이 없다. 소위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적이라면 실질적인 견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운영 원리라는 삼권 분립은 국가기구 간 견제일 뿐이고, 대중에게는 실질적 권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삼권 분립의 기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독립 혁명 후 수립된 미국 국가는 최초의 삼권분립 국가이다. 독립 혁명 과정에서 기여한 대중에게 어쩔 수 없이 선거권을 보장하는 양보를 했다. 미국 건국자들은 대중에게 선출권을 준 의회가 혹시라도 대중의 지배를 추구하는(민주주의) 입법을 하게 될까 봐 이를 견제하려고 사법부에 법률 위헌심판 등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선거 중심주의의 약점

각 기관들의 구조와 기능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기관 운영자들을 직선제로 선출한다 해도 해법이 되지는 않는다. 지배자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설사 허용된다 해도 고위직 개인들이 국가와 기관의 성격을 벗어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선출된 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방해할 한다고 가정하면, 모든 국가 공무원을 선출할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선출된 주요 관료들에게 나머지 국가기구가 그저 상명하복하길 바라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이처럼 소수에 의한 다수 지배인 자본주의적 계급 지배

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사회 전체를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창출된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됐다.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요구였다. 자본주의적 불평등이 너무 끔찍했고, 그것이 자본주의가 약속한 법적 평등 같은 가치들과 어긋났으며, 부르주아지는 갈수록 민주주의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민주주의적 요구는 처음에 정부 선출에 참가할 권리(참정권) 요구였다. 성공한 부르주아 혁명이 선거를 통한 대의제를 표방했기에 참정권 요구는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요구이기도 했다.

▶ 9면으로 이어짐



김민호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노동계급이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고 저항할 때 성장하기 시작할 수 있다

▶ 8면에서 이어짐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일어난 위대한 차티스트 운동이 최초의 참정권 운동이었다.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 의회에 노동계급의 대표들을 보내기를 원했다.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대체로 자본주의 하의 불평등이 정치 권력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정당한 요구였다. 그러나 온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노동계급은 보통선거권을 순차적으로 쟁취했다. 노동계급 남성을 시작으로, 마침내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선거권 연령 하향, 여성 선거권 보장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 하에서 쟁취한 보통선거권은 기대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성격과도 연관돼 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지배자들이 더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막지 못할 때 노동자들의 참정권과 조직들을 마지못해 허용해, 그 지도자들을 자본주의 국가의 일부로 통합해 전투성과 급진성을 억제하고 체제에 순치시키는 정치 체제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을 분리시키는 경향과도 연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와 맞는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시장은 생애적으로 반민주적이다

지배적 상식과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친하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첫째, 착취에 기초해 있다. 둘째, 무질서하고 조율되지 않는다. 셋째, 인간을 소외시켜 자유를 박탈한다. 따라서 민주적 시장경제는 용어(김대중 전 대통령이 매우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다)와 사뭇 다르게 비민주적이다.

시장에서의 권리와 자유는 소득이 있어

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생활을 이어갈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반면, 자본가들과 그들의 국가는 생산수단들을 통제하고 있다. 인구의 다수인 노동자들이 소득을 얻으려면 노동력을 팔아 자본가에게서 임금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근원적 불평등 때문에 자본가들은 지불할 임금보다 더 많은 노동을 정해진 시간에 시킬 수 있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착취다. 모든 임금 노동자는 자신의 자본가에게 임금으로 지불되지 않는 노동을 착취당한다. 이런 착취로 이어지는 노동력 판매 자체가 시장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이런 착취는 더 큰 불평등으로 구조화된다.

노동자는 소비자로서도 별 힘이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힘을 가진 구매자(소비자)는 투자자인 자본가와 국가이다. 그 과정에서 생산과 유통을 갈수록 대기업이 지배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집적과 집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두드러지는 것은 ‘소비의 표준화’ 현상이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자. 화려한 광고들 속에서 우리가 값이 돼 기종을 선택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겨우 두세 개 대기업이 제조한, 디자인만 살짝 다른 비슷한 폰들 사이의 선택이다. 오히려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기능들 때문에 갈수록 가격은 오르고, 더 비싼 최신 폰으로 계속 갈아타야 하는 유혹에 노출된다.

자본주의 시장의 무질서는 시장이 각 개별 주체들(특히 기업들)의 이윤 획득 경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역할을 분담할지

등이 민주적으로 토론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자동차가 과잉생산되고, 그 때문에 철강의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자동차 산업에 불황이 오면 철강 산업도 불황에 처한다. 그래서 멸절한 새 자동차와 기계, 철강 등이 버려진다. 자본주의 시장은 주기적인 경제 위기로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내쫓고 필요한 상품의 생산을 중단시킨다. 이 때문에 삶의 안정성은 더욱 훼손된다. 요컨대, 시장은 민주적 결정(그런 게 있다면)을 간단히 무력화시킨다. 자본주의 국가는 이런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구실을 하므로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과,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경쟁으로 내몰릴수록 사회 경험은 갈수록 더 파편화하고, 이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여가 생활을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 보도록 만든다. 이는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 현상의 일부다. 만연한 무관심과 이기주의는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람들을 육체적·정신적 녹초로 만들어 버린 결과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다수의 지배, 다수의 집단적 자기 통치를 지향하는, 즉 자력 해방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 노동계급 대중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현대에 와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형식적으로 보통선거권을 보장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듯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근본적 이유이다.

자본주의적 일상이 대중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노동계급이 자본의 지배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할 때 능동성과 의식성이 활성화되고 노동자 민주주의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다.

노동자 민주주의를 향하여

국가 주도적이었던 한국 경제는 성장의 결과로 1980년대부터 변화를 겪게 된다. 자본 축적에 성공해 민간 자본이 커지고 고용된 노동계급이 대규모로 성장하면서 국가와 자본, 노동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자본이 원한 경제 자유화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 재편을 뜻했다. 이는 이전의 정경 유착 관계의 재편, 규제 완화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새롭게 야기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일당국가 체제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실제로 전환케 한 동력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과 그 조직들이었다.

자본은 원하는 자유화를 이뤘지만, 그것이 노동계급의 기열찬 투쟁에 의한 것이었기에 노동운동을 적대했다. 1987년에 개정된 선거제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당 국회의원 비율이 달라서 도시 노동계급에 대한 계급차별 성격을 띠고 있다. 인구의 다수이기도 한 노동계급을 달래면서 억눌러야 했기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은 매우 불안정했고, 주기적으로 격렬한 갈등을 수반했다.

국가 형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개혁주의도 국가 구조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체제와 기층 대중의 모순된 압력 속에서 동요한다. 노련한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 모순을 화해시키려고 하며 가끔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주의 전략의 전제 조건이 된다.

지금 노동운동 안에서 이런 전략을 대표하는 것은 확고하게 주류 사회민주주의 전략을 채택한 정의당이다. 의회민주주의 아래서 집권해 진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을 “헌법 내 진보”라고 표방했던 것이다. 한편, 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결코 아니지만, 스탈린주의 전통에 따라 남한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들의 매개로 개혁주의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그러나 이런 개혁주의 전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상적이다. 오늘날은 특히 다음의 측면에서 부적합하다. 지금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를 보여 준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경제 장기침체,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위기는 자본주의를 정조준하고 해체해야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세계 도처에서 개혁주의는 이런 복합적 위기들을 해결하는 데서 실패하고 무능을 드러내며 그 자체로 위기에 처해 있다(타리크 알리가 말한 “극단적 중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위기에 맞서려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식이라며 국가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이 과제를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함께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한국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표방하지만, 그들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전환에서조차 행위자가 아니라 수혜자였다.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해관계가 별로 없다. 그걸 통해 얻은 정치적 이익을 대부분 얻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으로 진보 정당이 집권한다거나 국가보안법을 조건없이 폐지하는 일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과제들이 최우선 순위를 점하는 상황은 더는 아니며 또한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첫째, 주로 노동계급의 정치사상, 조직, 결사의 완전한 자유와 관련된 민주적 권리가 민주화의 남은 과제라는 것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세력이 노동계급이라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조차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적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를 통한 집권 그 자체보다는 투쟁 속에서 활성화될 노동자 민주주의의 싹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한국 노동계급의 과제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과 협력하는 민주 개혁 투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



거대한 '죽음의 공장'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전기 담장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역사적 과정이 홀로코스트를 낳았는지 이해해야 한다

홀로코스트 80년 — 그저 이례적인 역사적 사건 아니다

토마시 텅글리-에반스

올해는 홀로코스트, 즉 제2차세계대전 중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시작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무엇이 이런 대량 학살을 낳았고 어떻게 해야 이런 끔찍한 비극을 피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1월 27일)이 되면 우리는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고 외칠 것이다. 나치는 1941~1945년 사이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 유럽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였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과 로마인[“집시”는 이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 성소수자, 정치적 반대자들을 포함해 500만 명 이상이 나치 정권의 손에 끔찍하게 살해됐다.

이런 충격적인 참상은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진정한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구호가 단지 구호로만 남지 않으려면 무엇이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죽음의 수용소로 이르는 길을 닦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역사 내내 우익·반동 통치자들은 대량 학살을 자행해 왔다. 나치 또한 인종차별적이고 제국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파시스트 정권은 여느 권위주의 내지 군부 독재와는 달랐다.

파시즘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 성장했다. 사회적 위기, 이를 돌파할 노동자 운동의 부상과 실패가 이들의 성

장을 가속시켰다. 파시즘은 노동계급 조직과 민주적 권리를 분쇄할 수 있는 대중 운동을 건설했다.

소위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의회 민주주의는 보통 때는 자본가들에게 이윤 생산을 위한 안정을 가져다준다.

위기가 일부 고조되더라도 지배계급은 “무해한” 야당이나, 필요하다면 경찰과 군대를 이용한 탄압에 기대어 노동계급을 단속하려 들곤 한다.

그러나 위기가 심각해서 달리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지배계급은 기꺼이 민주주의를 버릴 것이다.

나치가 권력을 잡다

1920년대 이탈리아와 독일의 노동자 운동은 거의 권력을 잡을 뻔했다. 노동자 운동의 위협을 저지하려면 경찰, 심지어 군사 독재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지배계급은 이런 노동계급 운동을 분쇄하려면 이를 수행할 다른 대중 운동에 기대야 했다.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온 트로츠키는 1930년대에 파시즘을 두고 “[노동계급의] 적대 계급이 된 면도칼”이라고 했다.

“부르주아 독재가 의회라는 연막과 함께 ‘일반적인’ 경찰력과 군대로도 더 이상 사회의 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때, 파시스트 정권의 차례가 온다.”

1920년대 내내 아돌프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나치의 정식 명칭)의 힘은 미미했다.

1928년 총선에서 나치당은 2.8퍼센트를 득표하고 12석밖에 얻지 못했

다. 그러나 1929년 월스트리트 증시 대폭락 이후 2년 만에 나치는 제1 야당이 됐고 1932년 총선에서 제1 당이 됐다.

[그러나] 1933년이 되면 나치의 선거 전망은 어두워졌고 [공산당이 불법화된 상태에서 치른 5월 총선에서 나치의 득표는 공산당과 사민당의 득표 합계보다 적었다] 파시즘은 결코 선거로 권력을 잡은 적이 없었다.

독일 지배계급은 이미 1930년에 사실상 민주주의를 꺾어버린 남겨 놓았다. 군 장성, 우익 정치인들이 포진한 “남작들의 내각”을 통해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독일을 다스렸다.

그러나 이들은 커지는 위기와 노동계급 반란에 대처할 수 없었다.

결국 지배계급은 나치의 요구를 들어주고 히틀러를 총리로 앉혔다. 질서 회복을 위한 “필요악”이었다.

그 특정한 시점에서 나치의 목표와 독일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했다. 바로 노동계급을 짓밟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홀로코스트와 나치의 다른 범죄들이 그저 독일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화학 복합기업 이게파르벤 같은 대기업들이 홀로코스트 당시 나치가 시행한 강제 노역에서 득을 본 것은 분명 사실이다.

이게파르벤은 아우슈비츠-모노비츠 강제수용소에 특수 목적 공장을 두고 수용소 유대인들의 노예 노동을 사용했다.

그러나 홀로코스트는 단지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홀로코스트가 자본가들의 이해관계

의 연장선 상에 있었다면 왜 나치는 유대인들을 노예 노동으로 이용하지 않고 절멸하려 했겠는가?

제2차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치는 안 그래도 모자라는 귀중한 군사적 자원을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으로 돌렸다.

학살

심지어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에게 패배하고 있을 때에도 나치는 대량학살에 자원을 퍼부었다.

지배계급은 파시즘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나치는 단지 지배계급의 꼭두각시가 결코 아니었다. 나치의 사회적 기반은 트로츠키가 말한 “프티부르주아,” 즉 영세 자본가들, 자영업자, 농민층에 뿌리가 있었다.

이들은 자본가 계급처럼 부가 많지도 않았고 노동계급처럼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격할 힘도 없었다.

그래서 “프티부르주아”는 대자본과 노동계급 사이에 짓눌린 처지가 됐다. 나치는 자본가들에게 노동계급을 분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런 중간계급 층들을 드높이겠다고도 했다.

이것은 곧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나치의 거리 돌격대인 “갈색셔츠단”은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두 번째 혁명”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나치는 자본주의에 도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돌격대의 연사는 자본가들을 걱정스럽게 했다.

히틀러는 1934년 ‘장검의 밤’에 갈색셔츠단 지도자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순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트로츠키는 나치의 중간계급 기반을 “인간 먼지”에 비유했다. 이들을 멍치게 하기 위해서 나치는 갈수록 유대인 혐오에 기대게 됐다.

이는 홀로코스트를 설명하는 데에서 중요하다. 지배계급은 나치에 기댔고, 나치는 유대인 혐오, 중국에는 집단 학살을 이용해 기반을 결집시켰다.

나치의 유대인 혐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었고 오랜 유대인 박해의 역사 위에서 만들어졌다. [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이번 호 관련 기사 ‘유대인 혐오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보시오.]

오히려 나치의 독특한 점은 학살을 대공업 규모로 자행한 것과 나치 이데올로기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목적은 바로 자신들의 대중운동을 동원하고 결집시키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나치를 흉내 내려 하고 사회에 널리 퍼진 인종차별을 먹고 자라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반드시 이들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못하도록, 파시즘을 낳는 이 썩어빠진 체제를 끝장내야만 한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538호 / 번역 강미령

관련 온라인 기사



유대인 혐오의
뿌리는 무엇인가?

wspaper.org/m/25020

문재인 정부의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영끌’, ‘빚투’ 청년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양효영

12월 23일 정부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 유관 부처들과 청년 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 5개 분야의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청년 단체들을 끌어들이어 이런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싸늘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것일 테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20대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전체 지지율보다 낮다.

같은 날 문재인은 SNS에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 하길 바랍니다” 하고 썼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은 믿음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본계획의 대부분은 기존 정부 대책을 묶어 놓은 수준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나 여러 창업 지원책 등 각 부처가 이미 실행 하던 정책들이 마치 새로운 대책인양 들어간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모음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게 무색하다.

무엇보다 일자리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청년층 실업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청년층(15~29세) 확장 실업률*은 24.4퍼센



빛 좋은 개살구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청년들 환심만 사고 싶어하는 문재인 정부

트로 지난해 대비 4퍼센트나 증가했다(2020년 11월). 청년 중 약 116만 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2021년에만 55만 5000명의 **일자리**를 **지원(창출이 아니라)**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은 없다. 자세히 뜯어보면 볼수록 무책임하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2만 9000명 수준인데, 그중 2만 3000명은 겨우 30일 업무 체험이라 일자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머지 6000명도 3개월 인턴이다.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던 일이 무색하다.

우파 정부 시절 취업을 지표로 높이려 고안된 청년 인턴 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겉만 번지르르

일자리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10만 명)에게 6개월 동안 50만 원 구직촉진수

당 지급하고, 13만 명에게는 취업 지원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직촉진수당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이름을 바꾼 것인데, 수급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물론 이런 지원금은 생계 유지가 힘든 청년 일부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기본계획의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을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기존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들은 대체로 조건이 좋지 않고, 정부의 한시적 지원금이 끊기면 이후 고용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청년디지털 일자리(5만 명)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2만 6000명) 확대 또한 민간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정책인데, 대체로 영세 사업장들이라 일자리 질이 열악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다. 최근 탄력근로제 개악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조항 면제를 통

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시도는 이런 일자리 계획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시 임금 일부를 정부가 3년간 지원)도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이 장려금보다는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이 제도가 종료되는 해라서 지원금이 연장되지 않을 시 고용 유지가 우려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2년 이상 재직 시 정부·기업이 1200만 원 지원)는 청년층의 일자리 불만으로 인한 이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래 이 제도는 입사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이직하면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열악한 조건이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출근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규모와 혜택이 더 줄어들었고, 이직 규정은 더욱 빽빽해졌다. 이제 1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안 주도록 개악된 것이다(휴·폐업시는 제외). 규모는 13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축소됐고, 1인당 지원금도 2년 재직 시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삭감됐다.

공공임대 주택 대폭 확대?

청년층의 커다란 박탈감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부족한 대책을 내놔다.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청년층 주택 대책 방향은 대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결국 빚이 되므로 조삼모사 대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 할 수 없다.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청년층에 청년특화주택 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약간 늘리는 것이긴 하지만 226만 명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수의 10분의 1 수준으로 미흡하다.

또한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청년 맞춤주택을 2025년까지 35만 호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서, 오히려 계획이 후퇴한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청년특화주택 중 4분의 1가량 되는 7만 호는 공공임대 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 수량이다. 이런 민간임대 주택은 시세의 90~95퍼센트가량으로 너무 비싸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업자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느라 가격을 낮추도록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시장과 민간 기업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건 청년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없이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 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환심은 사고 싶어도, 시장주의 원칙을 고수하느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청년 대책이 나와도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책은 노동소득으로는 결코 내 집 마련과 미래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좌절을 겪으며 ‘영끌’과 ‘빚투’ 등에 이끌리는 청년들에게 결코 희망을 줄 수 없다.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하고 용감하게 도전해야 할 대상은 정부의 우선순위이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 있었는데 ... 현대차 비정규직 또 끼임 사망 이윤 때문에 기계 안 멈춘 사측이 죽게 만들었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장위원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월 3일 일요일,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프레스(금속 등에 압력을 가하는 기계) 부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협착돼 숨졌다. 이 노동자는 생산 설비를 관리·수리하는 하청업체 마스터시스템에서 근무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회사 중역이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 노동자에게 청소 작업을 급하게 지시했다고 한다. 방문을 1시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입됐고, 2인 1조는 고사하고 단 3명이 꽤 넓은 지역을 청소해야 했다고 한다. 원청 사측과 하청업체는 ‘안전 작업 허가서’ 등에 6명 투입을 명시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무시했다. 적은 인원이 급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연히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했지

만, 사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측은 연휴 이후 차질 없이 생산하려고 휴일인데도 일부 설비를 가동했다.

사고로 다친 노동자는 프레스 기계에서 나온 철판 끼여기들(스크랩)을 압착시키는 베일러 머신 주변을 청소하는 매우 위험한 일을 해야 했다. 결국 이 노동자는 베일러 머신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협착을 방지하는 각종 안전 장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일했기 때문에 누군가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없었다. 사측은 노동자 목숨보다 생산을 더 우선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하청업체는 중대재해를 은폐하려고 했다. 사측은 산재를 당한 동료를 발견한 노동자에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경위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이번 중대재해는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기도 하다. 평소에도 마

스터시스템 노동자들은 위험한 업무를 강요당했다. 이번처럼 가동되는 설비 안에 들어가 일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불과 수년 전 1차 하청업체가 업무를 담당할 때는 설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했지만, 2차 하청업체인 마스터시스템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6년에도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번에 사고가 난 곳 근처에서 비슷하게 협착돼 사망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후에도 안전을 위한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스터시스템 소속으로 1공장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회사에게 솔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안전관리자도 도급비가 들어간다.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줄 수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국내외 판매량이 15.4퍼센

트나 줄었다. 위기감이 커진 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투자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산재 사망은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해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이다. 1월 4일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이 신년사에서 말한 “품질과 안전”에 노동자의 생명은 없었던 것이다.

비밀비재

사측은 “작업자가 지침을 어기고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을 임의로 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재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원청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는 일은 너무나도 비밀비재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의 책임 범위를 대폭 줄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안은 사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정당화해 줄 뿐이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

니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요구하듯,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한다.

1월 5일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외주화 중단, 2인 1조 실시와 안전 인력 확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하라고도 촉구했다.

노동자들의 투쟁도 중요하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현대차 사측은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기업주의 편익을 봐주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계속 위협당할 것이다.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사측의 이윤 물이에 맞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민주당-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합의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안에서 더 후퇴하다

김지윤

1월 3일에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월 8일 국회에서 애초 정부안보다도 더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당은 1월 5일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업주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1월 6일 다시 소위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의결할 것이라고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소상공인 업체(상시 노동자 10명 미만, 업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와 학교를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등은 논의 중이라고 한다(1월 6일 18시 기준).

이번 합의를 보면, 사망사고를 낸 책임이 있는 경영자의 선고 범위가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이다. 이는 12월 28일 정부가 제시했던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벌금’과 비교해,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은 없앤 개악안이다. 법인에 대한 처벌 하한선도 없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등은 양당 합의 내용을 비판했다.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면서 온전한 법 제정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과 합의를 시도했을 때부터 이와 같은 후퇴는 예견된 것이었다.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기업주들의 책임을 제대로 늘리자는 것에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처럼 정권을 위기에서 구출하려는 법은 단독으로 강행하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 또 외면하려는 문재인 정부 1월 4일 국회 앞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기자회견'

노동개악과 기업 지원을 우선한 예산안은 국민의힘과 합의해 처리해 왔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 제정 요구도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미루려고 했다. 그래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여태까지 여당이 그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고 일침을 놓자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은 어떤 대꾸도 하지 못했다.

경총 등은 ‘사업 못 하게 하는 법’이라며 우는 소리를 하지만, 정부안은 오히려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정부안은 **기업주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대폭 좁히고, 원청·발주처 책임은 아예 면하게끔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어렵게 한 것이다. 법 위반 시 벌금 하한액을 대폭 낮추고 상한

액을 마련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투성이였다. 그마저도 **50명 미만 사업장은 4년, 50~100명 미만 사업장은 2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본지 350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껍데기만 남았다”’)

그래서 단식 농성을 해 온 유가족들은 “정부안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라고 즉각 반발했었다.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월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사업장 범위를 50~300인 미만으로 늘리자’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자신이 얼마든지 더 후퇴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정부 통계로 연평균 20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지금도 매일 5~6명이 죽

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처벌 범위를 다 빼고 나서도 법 적용을 2년, 4년 뒤로 미룰 거면 도대체 지금 법안을 서둘러 제정하는 이유는 뭔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

1월 5일 법안소위가 열린 날 오전 국회 단식농성장 앞에서는 산재피해당사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꼭 담겨야 할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안이 담지 않은 내용들 —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원청과 발주처 처벌 조항 포함, 50인 미만 작업장 유예 조항 삭제, 반복된 사고와 사고은폐 기업에 인과관계 추정 등 —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월 5일 합의 내용을 보면, 여당은 또 한 번 가족들의 바람

을 외면했다.

뻔뻔하게도 민주당 대표 이낙연은 1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것이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단식농성 중인 산업재해 희생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게 해 드려야 한다”고도 했다. 몰염치의 극치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관심은 기업의 이윤 지키기에 있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노동개악으로 이를 실행해 왔다. 노동시간을 늘리고 기업주들의 임금 부담을 줄일 탄력근로제를 확대했다. 반면,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규직화 약속은 나 몰라라 한다.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서 2년이 지났지만 2019년과 2020년 8월까지 발전소 노동자 67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고 그중 91퍼센트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2020년 산재사망자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다. 산업재해는 법의 미비뿐 아니라 정부의 의지 부족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강태선 세명대 안전보건공학과 교수는 “사회적 압력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제정된다면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월 6일자)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뒷전에 두고 비용 절감과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산업재해 피해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문재인은 이런 체제를 수호할 임무에 맞게 국가를 운영해 왔다.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정부도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이유다.

많은 노동자와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온전히 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신 나간 체제의 우선순위에 정면 도전하는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철도 비정규직 외면하고 KTX 시승 행사 참가한 문재인

이재환

1월 4일 강원도 원주역 앞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날 원주역에서 열린 강원 원주~충북 제천 복선전철 노선의 ‘KTX-이음’ 열차 시승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이 행사를 겨냥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착취가 정부 정책입니까! 비정규직 처우개선 어디로 갔습니까?”

“코레일 자회사,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대통령이 해결하라!”

“대통령의 약속을 담은 합의서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55일 동안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재

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시승 행사장으로 갔지만, 경찰에 가로막혔다. 문재인은 시승 행사에서 “KTX-이음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행복을 실어 나를 희망의 열차”라고 했는데 그 열차에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위한 좌석은 없었다.

해를 넘겨 파업 중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철도고객센터 지부)은 해를 넘기며 57일째 파업(1월 6일 현재) 중이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고,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기재부, 국토부, 원청인 코레일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사측 모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15일째 노숙농성을 지속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앞장서서 공공기관 사회사 정책을 추진한 청와대야말로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1000여 명은 추운 겨울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해를 넘겨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